

중국 소비의 최근 동향 및 성장 견인 가능성

중국의 소비는 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에 힘입어 최근 호조세가 가속화되는 모습

앞으로도 소비는 그간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농촌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다만 소비가 호조를 보이더라도 선진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신흥시장국에까지 파급되면서 수출이 크게 부진해질 경우 성장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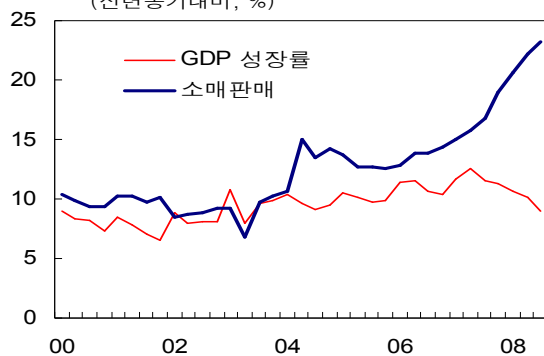
(최근 중국의 소비는 호조세가 가속화)

□ 최근 중국의 소비는 호조세가 가속화되는 모습

— 2004년 이후 10% 초반대에 머물렀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2007년 상반기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금년 3/4분기에는 23.2%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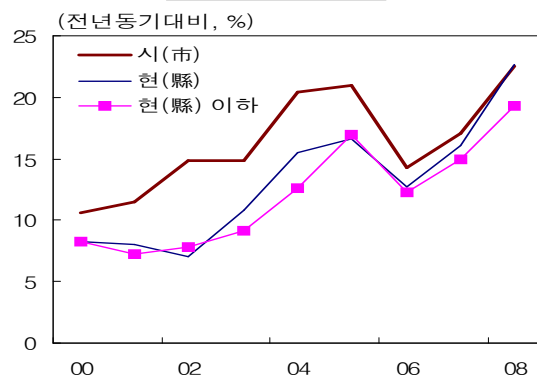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시(市)급 도시 중심의 소비 호조세가 현(縣), 현(縣) 이하로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현(縣)의 소비 증가율이 시(市)를 상회

GDP 및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자료: CEIC

소매판매 증가율¹⁾
(전년동기대비, %)



주: 2008년은 1~9월중

- 소비구조도 생활필수품 중심의 소비에서 고가 내구재 수요로 이전되면서 도시 가구당 세탁기, 냉장고, 컬러TV 등의 보급률이 100% 전후로 높아졌으며 컴퓨터, 자동차의 수요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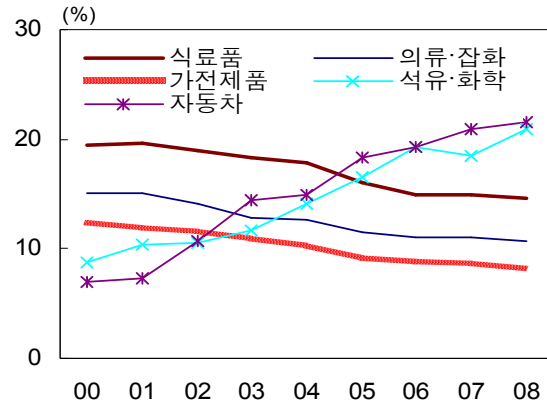
도시 100가구당 내구재 보유

(단위: 개, 대)

	2004	2005	2006	2007	2008.6
세탁기	95.9	95.5	96.8	96.8	94.3
냉장고	90.2	90.7	91.8	95.0	93.3
컬러TV	133	134.8	137.4	137.8	131.8
에어컨	69.8	80.7	87.8	95.1	98.7
컴퓨터	33.1	41.5	47.2	53.8	57.8
휴대폰	111.4	137.0	152.9	165.2	169.3
자동차	2.2	3.4	4.3	6.1	8.6

자료: CEIC

소매판매액 비중¹⁾



주: 1) 2008년은 8월까지 수치임

자료: CEIC

□ 최근의 소비 호조는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는 제11차 5개년계획(2006~10)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 지역간 소득격차 축소 등 내수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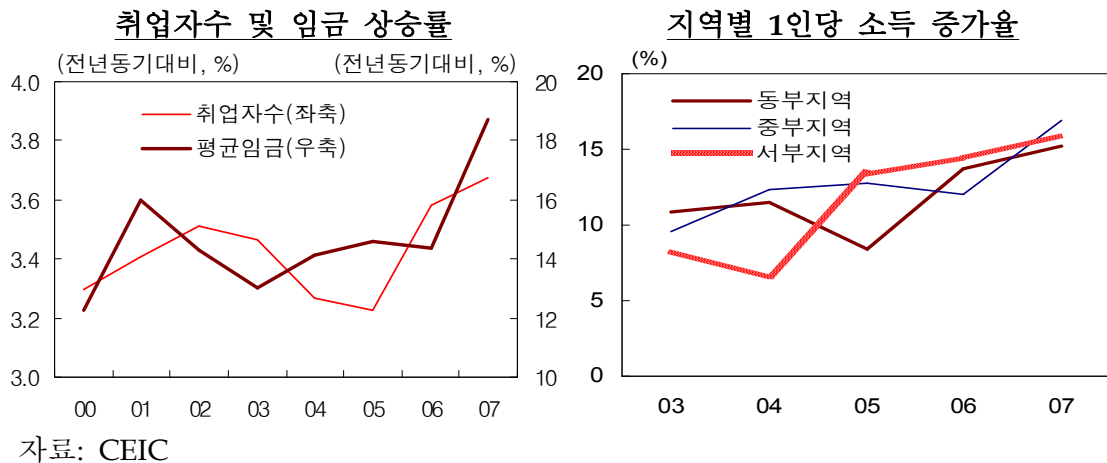
- 2006~07년중 지방정부는 근로자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2006년중 공무원 급여도 10% 이상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호적제도 개혁으로 농촌의 비농업 종사자 도시 이전을 촉진

* 2004년 '최저임금규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명문화

· 정부의 고임금 유도정책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이 빠르게 상승

- 한편 2006년 이후 농업세 폐지, 곡물 수매가 인상, 농기구 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촌 소득 확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 이에 따라 중부 및 서부내륙지역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동부지역을 상회



—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계속 시행

- 노동계약법 시행(2008년 1월)으로 근로자의 장기고용을 의무화하고, 초과근무 제한 및 수당지급을 규정하는 한편 금년 3월에는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1,600위안에서 2,000위안)
- 소형주택 수혜 대상자를 최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보험 및 양로연금 등 사회보장 정책도 강화
- 농촌지역의 경우 가전제품 소비에 대한 보조금(15%) 지급, 곡물 구매 가격 추가 인상 및 농민공(農民工)에 대한 양로연금 보장을 추진

내수확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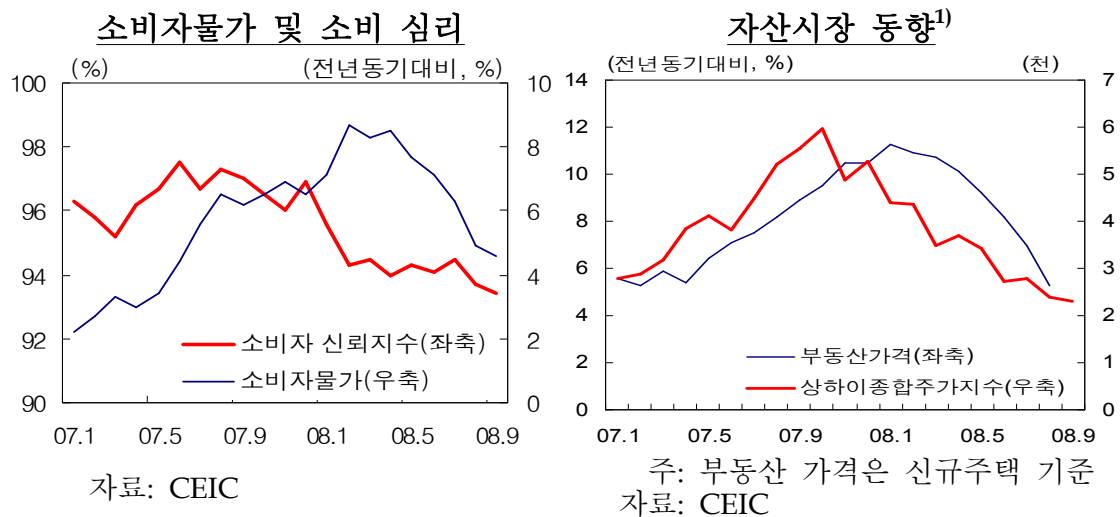
조 치 내 용		일 자
구 매 력 확 대	<소득증대>	
	- 최저임금 규정에서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인상 명문화 (2007년중 평균 10% 이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 공무원 급여 10% 이상 인상 - 곡물 수매가 인상 - 근로자 임금 협상권 부여	2004년중 2006년중 2008년중 2008년 5월
	<보조금 지급>	
	- 농기구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산둥성(山東省) 등 4개성에 대해 가전제품 소비 보조금(15%) 지급 - 농기구 구입 보조금 확대	2006년 이후 2007년 12월 2008년중
	<세금, 공과금 인하>	
	- 농업관련 세금 폐지 - 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1,600위안에서 2,000으로 상향 - 개인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폐지	2006년중 2008년 3월 2008년 10월
생 활 안 정	<고용안정>	
	- 장기고용 의무화 및 퇴직금 지급 의무화 - 연금, 의료, 실업, 상해, 출산 등 보험가입을 규정 - 초과근무 제한 및 수당 지급	2008년 1월
	<사회보장 확충>	
	- 농촌 의무교육 확대 및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도입 - 농촌 인프라 투자 및 현(縣) 이하 일용품 배송센터설치 - 호적제도 개혁으로 농촌의 비농업 종사자 도시이전 촉진 - 양로연금을 제정하여 2009년까지 각 성별로 실시 (농민공에 대한 양로연금을 포함) 2008년 농촌 인프라 건설 투자액 1,000억위안 이상 증액 - 新의료개혁안을 통해 의료서비스 및 의료보장범위 확대	2006년중 2008년 1월 2008년중 2008년 10월
	<주택공급 원활화>	
	- 소형주택 수혜 대상자를 최저소득에서 저소득으로 확대 - 토지 양도 소득 중 임대주택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 - 임대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증대 -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체계를 확립 - 주택 공적금(장기 주택예금)제도를 정비	2007년 8월 2008년 5월

(최근 들어 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증가)

□ 그간의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와 자산시장 침체 등 소비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증가

— 높은 물가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추세

○ 또한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역자산 효과에 의한 소비 위축 가능성도 증대



—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도산기업 증가로 고용 및 소득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 1~8월중 제조업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9.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0%)에 비해 크게 하락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중 도산기업 수가 6만 7천개, 실업 근로자수가 2,00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広州日報, 8월 4일)

□ 향후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가 수출 둔화를 상쇄하며 성장세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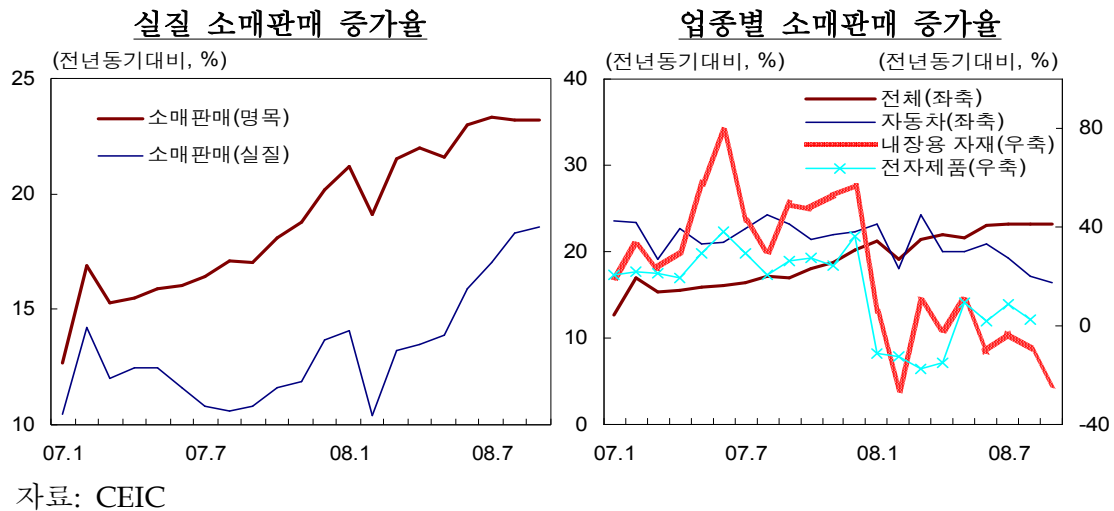
- 일부에서는 중국의 사회보장 확충 및 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 확대로 순수출 감소 영향을 상쇄하고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
 - 류밍캉(劉明康)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교육, 의료보건 투자 증가로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잠재력 확대로 수출 감소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
- 반면 세계경기 둔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내수도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
 - 중국 인민(人民)대학 류위안춘(劉元春) 교수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그러나 중국 국내요인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

- 물가 상승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중국 국내요인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그간 높은 물가 상승세에도 실질기준 소매판매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향후 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쑹쩌(宋則)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안정은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9월 23일, 上海證券報)
 - 주식 개인투자자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며 주택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으나 일부 대출 부담이 큰 가계에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전체 인구 중 개인투자자비중은 2%로 매우 낮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며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보유자는 일부에 국한되고 주거 목적의 일반주택 가격 하락은 가계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

* 2008년 6월중 전체 대출중 주택모기지 대출 비중은 11.5%에 불과하며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이 여타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낮음

- 따라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부 고급 소비재와 건설 및 내장공사 관련 소비재 판매는 둔화되나 전체 소매판매 증가세는 높은 수준 지속



(2009년에도 소비는 대체로 호조를 지속할 전망)

- 수출 감속이 소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농촌 소비 확대 등으로 2009년에도 소비는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수출 부진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도산기업 증가 등은 고용 및 소득 환경을 악화시켜 소비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농촌 소비 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소비 증가세가 견조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최근 개최(10월 9일~12일)된 중국 공산당 제 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농촌개혁 중심의 내수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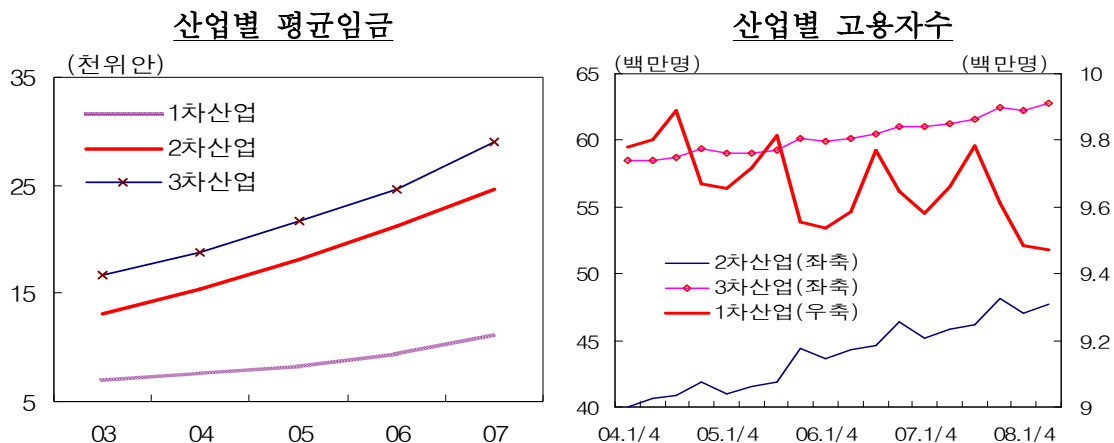
· 2020년까지 농민소득을 현 수준의 2배로 증대시켜 빈곤층을 퇴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소비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을 천명

-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민에게 토지의 양도권, 임대권, 출자권, 저당권 등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담보대출 및 토지 양도를 통한 대규모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소득 증가 및 토지 가격 상승에 의한 자산소득 가능성을 확대

○ 임금 수준이 높은 서비스업의 발전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제11차 5개년계획에서 3차산업 비중을 43.3%(2007년중 40%)까지 상승시킬 것을 규정

- 2006년 4/4분기중 6,000만명 수준이었던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2008년 2/4분기중 6,300백만명으로 확대



자료: CEIC

— 특히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중국 경제의 감속을 억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에 소비 확대 방안이 대폭 포함

○ 10월 17일 국무원은 수출 촉진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책과 더불어 저소득층 지원 확대, 곡물 매수가격 인상, 주택거래세 인하 등 내수확대 방안을 발표

- 또한 10월 22일에는 소비 확대 방안으로 가전제품 보조금(15%) 지급 지역을 종전 4개성(省)에서 14개성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결정

- 경기 감속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 정부는 소득세 과세기준 상향조정등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 소득세 세액공제 기준을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조정(3월 1일)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며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5%)는 면제(10월 9일)
 - 재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2009년부터 1,500억위안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감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관측
- 다만 소비가 호조를 보이더라도 선진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신흥시장국에까지 파급되면서 수출이 크게 부진할 경우 성장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
 - 3중전화에서 논의된 농촌개혁 조치는 농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내수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 리이닝(厲以寧) 전국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은 금번 조치로 8억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평가*
 - * 2004년 이후의 농업세 폐지는 도·농간 소비격차 축소에 큰 효과가 있었으며 이번의 토지규제 완화 및 농촌 지원정책으로 농촌의 소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10월 15일, 일본 信金中央金庫)
 - 그러나 선진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신흥시장국까지 파급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수출의 감속이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 이 경우 소비가 호조를 지속하더라도 수출 둔화의 영향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
 - 또한 일부에서는 경기 불안 심리 등으로 가계 저축을 늘리고 있어 소비수요 증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 Michael Pettis 북경대학 교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개인의 소비의욕을 감퇴시키고 저축 심리를 자극했다고 지적(9월 18일)